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인주화

2024/ 3/ 6 통권 166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미래를 향한 도전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됨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합병·분할의 개념과 법인세 과세체계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로열티는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매출발생종료일 등의 시점에 익금인식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연금소득세 과세방법 비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개념,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정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립학교직원연금(1항 1호)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확정기여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등)(1항 2호)
연금수입	매년 연금총액(종합과세)	연금계좌입금액(분리과세선택가능)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350만원 + (350 초과 700만원) × 40% + (700초과 1400만원) × 20% + 1400만원 초과액 × 10% ≤ 연 900만원	분리과세기준금액: 각 연도 연금총액 1500만원까지임
연금소득금액	연금수입 - 소득공제	연금수입 - 분리과세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공제 등 각 150만원	해당안됨
적용세율	· 종합소득에 합산 후 누진세율 다단계누진세율 1400만원까지 6% + 5천만원까지 15% + 8800만원까지 24% + 1.5억까지 35% 등 (38, 40, 42, 45%)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형연금 4% 연금외 기타 15%
종합소득합산	일부 연금 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됨	각 연도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 분리과세 선택가능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운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세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5호 / 주간 10호

2024. 3. 6.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연금소득세 과세방법 비교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표지
C E O 에 세 이	미래를 향한 도전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문화재단의 음악회 후원 시 회계처리 - 시골집(무허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대상 여부 - 회계처리 문의 -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계산법 - 기업 관련 세법 하위규정 변경안	8 9
직장인Survival	제스처로 사람을 읽는 법 8가지 - ①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사전법규법안-1204, 2023.03.16) -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691, 2023.03.15)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다자녀 부모' 따로 살아도 자동차 개소세 면제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로열티는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매출발생 종료일 등의 시점에 익금인식함	11
세 무 정 보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합병·분할의 개념과 법인세 과세체계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14 19 23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미래를 향한 도전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다. 일과 학업 그리고 휴식의 구분이 없는 융합적 사회(Blended Society), 온라인 메타버스, 국경이 없는 초국적 사회(Transnational Society)로 불리는 사회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이른바 세계화 쇼크, IT·하이테크 쇼크, 민주화 쇼크가 서로 부딪히며 변화·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 그리고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복지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또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추세, 가족 기능이 변하며 1인 가구가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격변기의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하이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하이테크가 선도한다. 하이테크는 성공률이 낮은 만큼 열매는 크다.

한국벤처비즈니스의 역사는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KIST와 전자기술연구소에 근무하던 이용태씨가 삼보컴퓨터를 세워 오늘날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같은 시기에 KIST 교수로 있던 이범천씨와 그의 후배들이 큐닉스 컴퓨터를 차려 주요 컴퓨터 기기분야에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큐닉스도 아픔을 겪었고 삼보컴퓨터도 창업자 2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끝내 부도를 면치 못했다.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벤처 신화를 일군 메디슨도 전CEO이민화 회장의 방만한경영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삼성전자에 인수되며 삼성메디슨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미래산업, 한글과 컴퓨터, 펜텍은 벤처창업 열기를 복돋아주었던 낮익은 이름 들이다.

이러한 하이테크 기업의 성쇠는 선진국 벤처의 본 고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애플 CEO인 스티브 잡스는 인생역전의 용사이며 드라마틱한 현대의 영웅이다. 시가 총액 기준 세계 1위. 2023년 애플의 성적이다. 2000년 세계340위를 마지막으로 퇴출당한 애플이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애플의 흥망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삶과 연관돼 있다. 애플은 1976년 창고에서 태어났다. 대학

을 중퇴하고 고학하던 잡스는 나이 스무살에 세계 최초로 PC를 만들었다. 이후 승승장구했다. 5년 뒤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창업 10년 후 애플은 4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로 컸다. 그러나 그는 해고됐다. 급격한 실적 감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그의 나이 서른이었다. 당연히 고뇌의 몸부림을 쳤다. 잡스는 다시 시작했다.

잡스는 세계최초로 ‘토이스토리’와 ‘니모를 찾아서’라는 디지털 만화영화로 재기해서 1997년 애플CEO자리에 복귀했다. 이 때가 그의 나이 마흔 둘이었다. 2004년 그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며 그에게 주변을 정리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받았고 사망선고로부터 부활했다. 그는 라이벌 빌 게이츠와 끊임없는 대결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도전은 IT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와 생명과학, 에너지 개발, 우주 및 해양개척 분야에서 무한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일테면 신소재, 인공장기, 태양탐사 등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각광받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디지털 만화처럼 문화와 복지분야가 계속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는 과학과 문화가 충돌하며 탄생하는 소프트를 열광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직업들이 우대될 것이다. 미래는 좌절을 극복하는 도전과 창조가 빚어내는 가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현재는 항상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23일 (금)	2월 26일 (월)	2월 27일 (화)	2월 28일 (수)
미	달	러	(USD)	1331.00	1329.30	1331.40	1331.30
일	본	엔	(JPY)	884.53	883.11	883.57	884.73
영	국	파	운 드	(GBP)	1685.31	1684.89	1688.75
캐	나	다	달 러	(CAD)	987.35	984.27	985.60
홍	콩	달	러	(HKD)	170.15	169.90	170.17
중	국	원	(CNH)	184.99	184.52	184.76	184.67
유	로	화	(EUR)	1440.74	1438.57	1444.70	1443.73
호	주	달	러	(AUD)	872.94	872.62	870.47
싱	가	폴	달 러	(SGD)	991.10	989.54	990.22
말	레	이	시	링 기 트	(MYR)	278.66	278.24
						278.71	279.57

문화재단의 음악회 후원 시 회계처리

- Q**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대한 후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음악회 팸플렛 등 홍보물에 후원기업에 대한 홍보(업체명 기재), 초대권 증정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 후원금 지급절차는
- 문화재단에서 협찬 요청
 - 협찬요청에 따른 협찬약정(약정 시 해당 재단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협찬금 지급
- 이럴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A** 어떤 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팸플렛 등 홍보물에 홍보업체 기재 등의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골집(무허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대상 여부

- Q**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 소유주 (무허가 건물) 에 부속된 토지로
토지등기부등본 상 1983년 4월 10일 재산상속 (접수 1988년 3월 24일)
상속인 : 본인과 사촌들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
(재산세 문의)
- 1) 시골집이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 것인지 ?
 - 2) 시골집이 무허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무허가 주택에서 부속토지만 지분 보유시 1가구 2주택 기준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
- A**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
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유권해
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1세대2주
택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계처리 문의

- Q**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 A**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 Q** 1. 미국 본사의 자회사인 미국내의 A 회사 소속 영업직원이 한국 관계회사(C사) 고객 관리를 위해 한국에 파견됨.
2. 한국내 체류기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 B와 A는 관계회사 거래로 B가 C에게서 order를 받고 A에서 제작하여 미국 C사에 납품함.
3. 영업사원은 영주권자이며 한국 국적 소유
4.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 천안에 건강보험 명목으로 대략 약 \$300을 지원해 달라고 함.
5. 영업사원 급여는 모두 A에서 지급함.
미국소속 영업직원에게 한국내 체류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 명목으로 월 \$300지급시 세무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세무 issue)
- A** 미국관계사의 직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된 경우인데, 귀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파견직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의 업무수행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임직원의 급여나 수당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처리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해외파견 기간이 지나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인바, 이러한 해외파견자는 국내에 남아있는 일반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거주자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면 된다.

따라서 해외지사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월 간이세액조건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급여가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급여가 지급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해외 파견자의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월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이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파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매월의 급여총액에서 100만원을 비과세로 공제한 후 간이세액조건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❶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해외 현지에서 과세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 과세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주자인 해외 파견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 신고납부시에 해외의 현지에서 부담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서아-1781, 2004.08.2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해외주재수당 등의 세무처리

해외지사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교통 등 국내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에서는 급여 이외에 해외주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한다.

해외주재 수당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거나 또는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나 회사에서 주택이나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상속세 · 증여세 세율 및 계산법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0
1억~5억 이하	20%	1000만
5억~10억 이하	30%	6000만
10억~30억 이하	40%	1억 6000만
30억 이상	50%	4억 6000만



상속세 · 증여세 공제액 차이

	상속세	증여세(합산10년)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 재산 5억 미만 시 5억, 5억 이상일 때 최대 30억	6억
성년 자녀	1인당 5000만	5000만 + 결혼·출산 시 1억 추가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	2000만



기업 관련 세법 하위규정 변경안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HBM·수소환원제철 등 5개 생산시설 추가
-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혜택 증대

- SMR 일체화 우너자로 등 11개 설비투자 공제
- 대기업 6%, 중소기업 18% 세액공제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본사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도 공제
- 이전 시 상속 후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배제

글로벌 최저한세 정비

- 매각 대상 기업 실적을 세율 계산에 반영
- 계산 시 배당소득 제외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 특허수수료 50% 감경
- 2023년 매출액에도 적용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 조정

- 감가상각 기준 기간 5년으로 통일



AI 적용한 홈택스 고도화 전략

	기존	개선
MY홈택스	신고·납부내역 등 일반정보 제공	개인·사업자 등 유형별 필요 서비스 제공
메뉴 단순화	메뉴화면 너무 많아 불편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메뉴만 제공
대화형 화면	복잡한 서식과 어려운 세법 용어	대화형 화면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
검색기능	불편한 검색 기능	생성형 AI기술 적용
AI상담원	대기시간 많아 불편	최적 답변 생성, 음성발화 기술로 안내



제스처로 사람을 읽는 법 8가지 - ①

1. 개방적인 제스처

대부분의 사람에게 진지함과 개방된 자세를 느끼게 해주는 제스처 중 하나가 바로 손을 벌린 자세다. 서양인들은 공공연하게 낭패를 당하거나 했을 때 손을 벌린 제스처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제스처 역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손을 벌린 자세와 비슷하다. 배우들은 이 제스처를 감정을 드러내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배역의 개방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반면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의심이 들 때는 손을 주머니 안이나 등 뒤로 숨겨버린다.

2. 방어하거나 화났을 때의 제스처

팔짱을 끼는 것은 대표적인 방어자세다. 교사나 의사들도 다른 의사들과 함께 있을 때 같은 제스처를 보인다. 아이들이 부모의 지시에 반항할 때, 노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때도 팔짱을 낀다. 만일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방어적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손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의 손이 이완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먹을 쥐고 있는가? 손을 꼭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방어자세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좌석 팔걸이를 움켜쥐고 불안해하는 자세와도 같다.

3. 평가의 제스처

연설이나 강연, 프레젠테이션 중에 마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흡사한 자세로 뺨에 손을 받치고 있는 사람은 흥미와 열의를 나타내는 자세다. 그 외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든지 혹은 옆으로 몸을 틀고 앉아 있는 사람, 한 손이나 양손을 머리에 가져다댄 채 머리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다소 비판적 혹은 냉소적이든가 아니면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로열티는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매출발생종료일 등의 시점에 익금인식함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사전법규법인-1204, 2023.03.16

질 의

- (질의1)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귀속시기
(감설) 매출액 산정기간('22.1.1.~'22.11.27.)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로열티 지급법인의 감사보고서 확정일('23년 중)이 속하는 사업연도
- (질의2) 질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
(감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7년)
(을설) 특허권 잔여존속기간(3년)

회 신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22.1.1.~'22.11.27.)의 종료일"에 확정되는 경우에

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7년)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인-5580, 2023.08.03

질 의

-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회 신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691, 2023.03.15

■ 질 의

- (질의1) 상속개시 후 공동대표자로 취임한 가업상속인 2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해당 가업상속인 2명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가업상속인 2명이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된다면,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계산 시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 회 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하 "가업기업"이라 함)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 "산정기간"이라 함)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단,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388, 2023.08.21

■ 질 의

- '13.2.15. 前 체결된 저축성 보험계약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약시 가입자에게 당초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 보험가입자가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초 약관에 따른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 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지 시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 변경을 통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다자녀 부모' 따로 살아도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환급 이자율 3.5%로 인상… 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같은 조치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와 연동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2.8%에서 3.5%로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평균 점포 보증금인 5835만 원에 변경된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34만8000원 늘어나며, 세액은 기존 대비 연 3만2900원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액은 15만3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금 감세, 주로 고소득층 혜택 향유… 저출산 대응 한계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 감세는 저출산 대응력이 낮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득세상 공제와 감면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세금은 납세자가 비용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부과한다.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것이며, 고소득층은 세금이 많아 감세 혜택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은 내는 세금이 적어 감세 혜택이 미미하다.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 가구나 미혼자들은 소득이 낮아 세금도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 정도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2.1%였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2024. 2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참고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2. 법인세법 시행령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 21)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 15²⁵)

당 초 안	수 정 안
<p>□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p> <p>*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p> <p>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p> <p>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p>	<p>□ 일부 사업장 이전·소재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적용</p> <p>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p> <p>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p>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p>□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p> <p>○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p> <p>- 근로자파견·공급 용역</p> <p>-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p> <p>○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p>	<p>□ 면제 범위 명확화</p> <p>○ (좌 동)</p> <p>- 근로자공급 용역</p> <p>-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p> <p>○ '25.1.1. 이후 공급분</p>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div>□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 (세율) <div>(원/kg)</div></div>				<div>□ 시행시기 변경 ○ (좌 동)</div>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div>○ (시행시기) ‘24.4.1.</div>				<div>○ ‘24.3.1.</div>	

<수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②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면세요건 ○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는 경우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면세요건 소급 적용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20px;"> ○ (좌 동) ○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div>	

<수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 공포일부터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7. 관세법 시행령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보상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input type="checkbox"/> 손실보상 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수정이유> 손실보상 금액 합리화

☐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이 정보제출 요청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범위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주체 및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체포·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 사실 및 처분내역 ○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대검찰청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2024. 2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 적용(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4개, 확대 1개)
반도체	▶ (확대 :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 (신규 :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수소	▶ (신규 :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 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7개, 확대 4개)
바이오 헬스	▶ (확대 : 2개)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시설 →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에너지 환경	▶ (신규 : 3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 영구정지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 ▶ (확대 : 1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 →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탄소 중립	▶ (신규 : 1개) 암모니아 발전 시설 ▶ (확대 : 1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방위 산업	▶ (신규 : 3개)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척·소득척·법인척·부가가치·관세척)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연 2.9%*

* 환급가산금 이자율(%) : ('17)1.6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 (개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 연 3.5%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 ('22) 3.11 → ('23) 3.84

- 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 : ('23.11) 4.18 → ('23.12) 3.88
-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기타 개정사항

1 법인세법 시행규칙

-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현 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년)
 - (개정안)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
-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 *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현 행) 1백만원 이하 : 10%,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 5억원 초과 : 1,332만원
 - (개정안) 5백만원 이하 : 10%, 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 : 2,81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아미팜프리딘 등 램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5

관세법 시행규칙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기간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50%) 근거 신설('20.12.)

- '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23년 매출액 추가

6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 확대

-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등 42종 / 임업기계 : 목재파쇄기 등 10종
(추가)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 (현행) 1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제외)
(개정)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

*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

합병 · 분할의 개념과 법인세 과세체계

— 국세청, 2024. 2

I 합병

1 합병의 개념 등

1. 합병의 개념

기업규모의 확장·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 간의 법률행위를 말함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4-0-1).

합병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원의 수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의 영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영업양도와 다르다.

판례 대법원 2008두8314, 2008.8.21.

회사의 합병이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회사 간의 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별도의 개별적인 이전행위 없이 합병등기에 의하여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단일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성을 위하여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 반면, 영업양도는 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이전행위에 의하여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승계이고 재산의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영업양도 후에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임



2. 합병의 유형

합병은 합병당사법인의 소멸 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대가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에 따라 일반합병과 삼각합병으로 구분됨

첫째, 합병은 합병당사법인(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된다.

"흡수합병"이란 어느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법인이 소멸하고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으로 포괄 이전되며, 소멸법인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존속법인을 합병법인이라 하고 소멸법인은 피합병법인이라 하며, 소멸법인의 주주는 존속법인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게 된다.

"신설합병"이란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고, 합병당사법인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멸되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신설법인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게 된다.

① 흡수합병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소멸)	⇒	합병법인
A법인		B법인		A법인

② 신설합병

피합병법인(소멸)	+	피합병법인(소멸)	⇒	합병법인(신설)
A법인		B법인		C법인

둘째, 합병은 「상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구분된다.

일반합병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간이합병(「상법」제527조의2)은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소규모합병(「상법」제527조의3)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 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규모합병으로 인정되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합병은 합병대가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이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자기주식)인 경우에는 일반합병, 합병당사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삼각합병으로 구분된다.

3. 합병의 절차

합병의 주요 절차로는 ① 합병계약서 작성 및 승인 결의 → ②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③ 채권자 보호 절차 → ④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⑤ 합병등기 등이 있음

가.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상법」제522조 및 제522조의2)

합병당사법인 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 조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정관의 내용을 정하고, 각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승인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승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병승인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제522조의3)

합병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주주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공고 및 통지 생략)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채권자 보호 절차(「상법」제527조의5)

주주총회 등의 합병승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라.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상법」제526조 및 제527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의 종료 등 「상법」제52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제52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마. 합병등기(「상법」제528조)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합병의 효력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합병의 본질

법률적 개념으로 합병의 본질은 인격이 결합하는 것으로 보는 "인격승계설"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현물출자설"로 구별됨

가. 인격승계설

"인격승계설"은 피합병법인의 인격이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인격에 속하는 권리·의무 관계인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이 그대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자산·부채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그대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으로 계상된다.

현행 세법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격승계설에 더 근접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현물출자설

"현물출자설"은 해산하는 회사를 현물출자하여 존속회사의 자본을 증가(흡수합병)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합병)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설에 의할 경우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존속·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구입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합병대가와의 차이는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현행 세법은 비적격합병에 대하여 현물출자설에 더 근접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1. 연혁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은 인격의 승계로 보아 청산소득 및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음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하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금융부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 상시적 조직재편 지원 세제를 정비하여 조직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과세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8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 최근 다양화된 인수합병(M&A)에 대하여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수합병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로운 형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합병세제* 적용

*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기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청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이연하는 제도

○ 현행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부분 과세이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에서 완전 과세이연(모든 자산)으로 전환

○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본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부동산 등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

* 설립시 한정 → 증자도 허용,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모든 자산으로 확대

종전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가치증가분(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으로 하여 일반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합병대가 총계(합병교부금 + 합병교부주식 + 포함주식)
-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 합병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 포함주식 : 합병일 전 2년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의제배당소득 = 합병대가(합병교부금 + 합병교부주식)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 합병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합병법인은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한하여 과세 이연을 적용하며, 과세 이연은 압축기장충당금(토지),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을 설정하고 자산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합병평가차익 = 자산 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2010.6.30. 이전 합병 과세체계

피합병법인	→	청산소득으로 과세
		* 청산소득 = 합병대가 총계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총액(합병대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특례합병시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
피합병법인 주주	→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 의제배당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합병대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특례합병시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
합병법인	→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 합병평가차익 = 자산 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범위 내 익금산입하되, 특례합병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을 청산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합병법인 단계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청산소득 및 합병평가차익을 각각 과세하는 과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이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하는

등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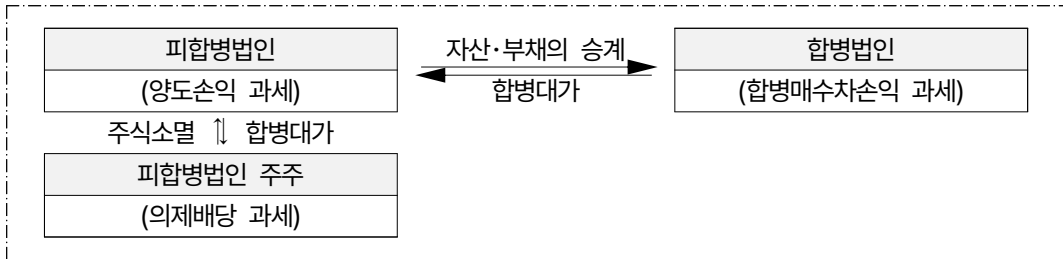
아울러, 특례요건 충족 시 합병시점에서 비과세되도록 합병교부주식을 경제적 실질과는 관계 없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우회적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미국, 일본 등의 과세체계와 같이 합병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취득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전·후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0.7.1. 전·후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구 분	2010.6.30. 이전 합병	2010.7.1. 이후 합병
피합병 법인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①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피합병 법인의 주주	①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과세이연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액면가액 ㉡ 과세이연요건 미충족 시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장부가액(취득가액) ㉡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
합병 법인	①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②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① 합병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과세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익금산입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손금산입 ②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적격합병 시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합병 법인의 주주	①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2. 기본 과세체계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양도손익,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과세체계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이전시키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과세한다.

$$\text{양도손익} = \text{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나.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과세체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text{합병매수차손익}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text{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구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의 주식(또는 그 모법인의 주식)과 교부금 등 합병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와 구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구주식의 취득가액)

라. 적격합병에 따른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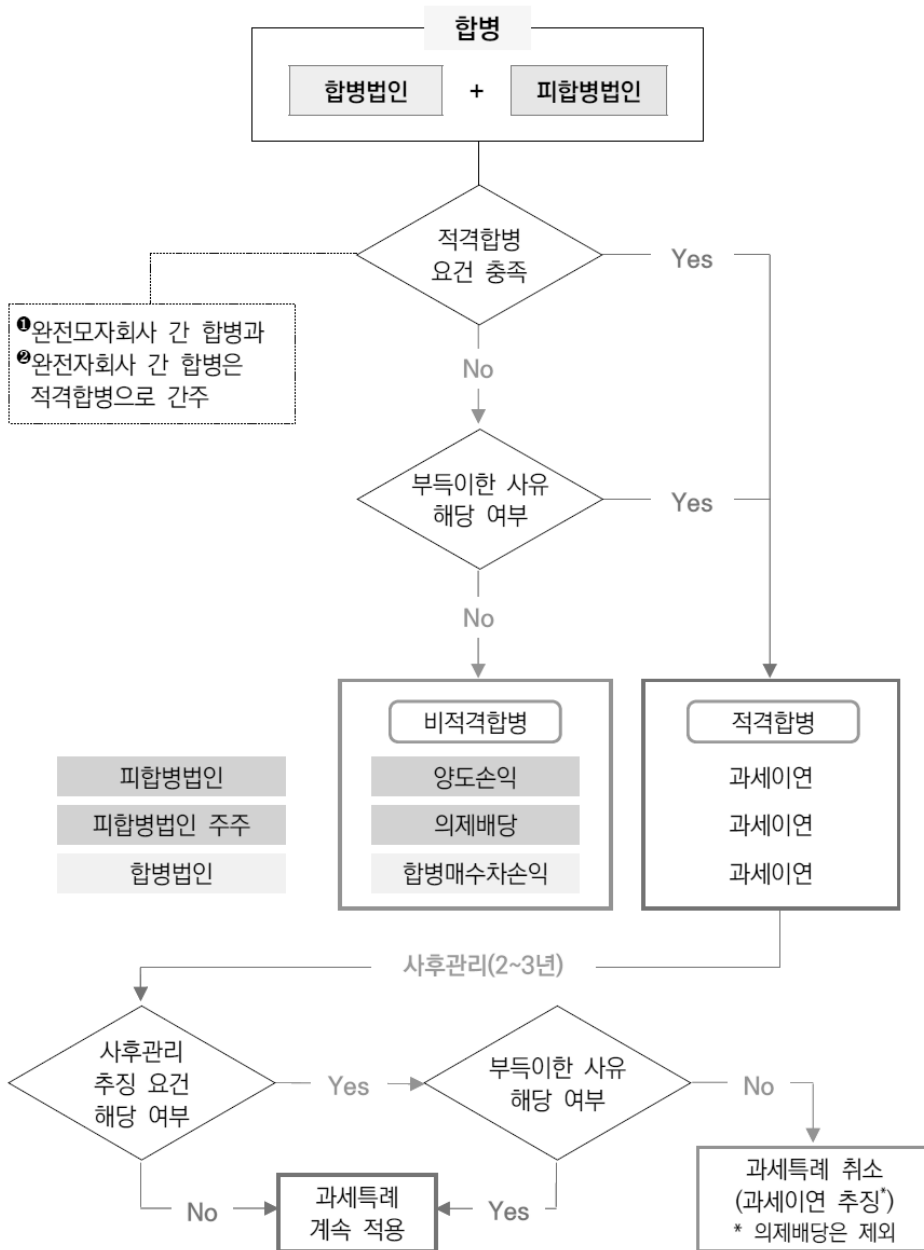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및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을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한다.

따라서 적격합병 시에는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합병시점 이후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합병 과세체계 요약

합병 과세체계 요약			
구 분		비적격합병(원칙)	적격합병(특례)
피합병법인		* 양도가액 = 합병대가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피합병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과세 = 합병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으로 받은 경우 : 시가	주식으로 받은 경우 합병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0
합병법인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 시가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후 해당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까지 과세이연
	결손금, 세무조정사항 등	승계 불가(단,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은 승계 가능)	승계 가능
	합병매수차 손익	과세(5년간 균등분할 손익 인식)	미발생



〈합병 과세체계 요약〉



II 분할

1 분할의 개념 등

1. 분할의 개념

회사의營業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營業財産을 자본으로 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등의 法律行爲을 말하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財産, 社員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6-0-1).

대량 생산체제에 있어서 기업은 원가 절감, 생산과 관리의 효율화, 기업의 사회적 지위강화 등을 위하여 자기 기업의 설비나 시장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단기간에 외적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선택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경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기업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독립화·효율화를 추구하게 된다.

2. 분할의 유형

분할은 분할 형태에 따른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분할대가 교부 형태에 따른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이란 여러 사업부문을 가진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를 출자한 법인을 '분할법인'이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을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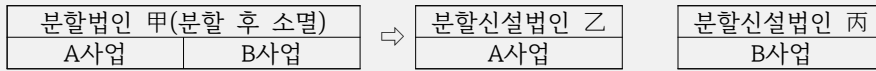
단순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①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②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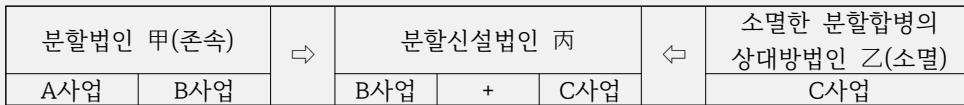


"분할합병"이란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1개 또는 수개의 기존법인에 출자하고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부문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소멸신설분할합병' 및 분할법인이 분할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존속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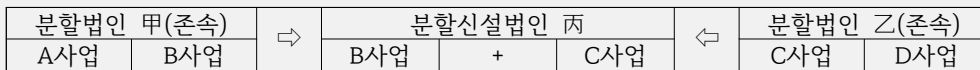
①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소멸신설분할합병)



③ 분할법인이 분할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존속신설분할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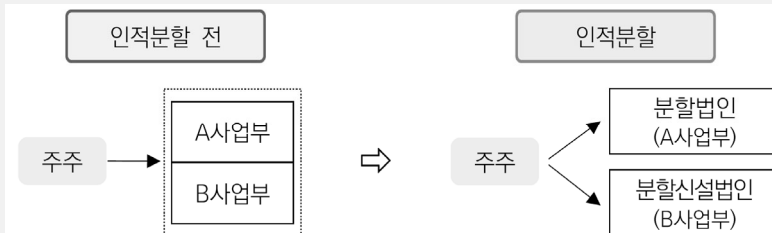
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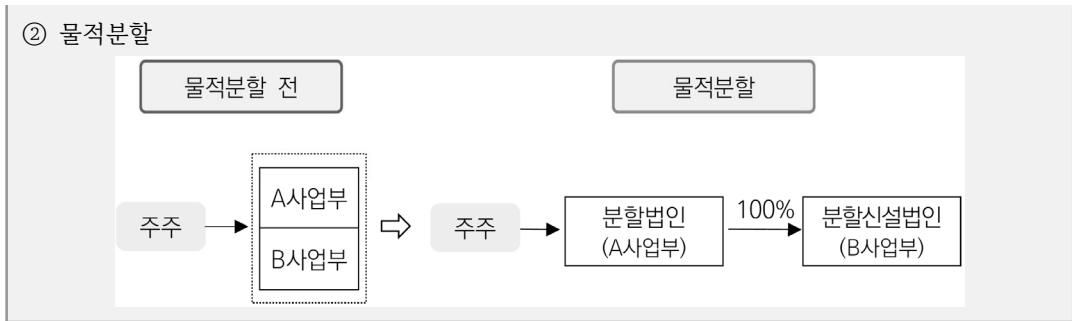
분할은 분할대가(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 등)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인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경우를 말하며, "물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이 전부 교부받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인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며,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는 분할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① 인적분할





3. 분할의 절차

분할의 주요 절차로는 ① 이사회결의 및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 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 ③ 분할승인 주주총회 → ④ 분할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매수 → ⑤ 채권자보호절차 → ⑥ 보고총회(창립총회) 및 분할등기 등이 있음

가. 이사회결의 및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회사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범위와 그 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사회결의 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상법」 § 530의3①), 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5에 명시되어 있고,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6에서 정하고 있다.

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구 분할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 161①6).

주권상장법인이 포함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가액 산정은 주권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시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준용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 176의6② 및 § 176의5①), 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 176의6③).

다. 분할승인 주주총회

분할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도 의결권이 인정되며(「상법」 § 530의3①~③),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 당사회사 모두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라. 분할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매수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가 없다(「상법」 §530의9①).

그러나,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즉, 단순분할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할 후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담보재산의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530의9).

바. 보고총회(창립총회) 및 분할등기

분할에 따른 보고총회(창립총회)는 합병의 경우를 준용하며(「상법」 §526, §527, §530의11), 합병에 따른 합병등기 규정(「상법」 §234, §528)도 분할에 준용한다(「상법」 §530의11).

2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1. 연혁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은 인격의 승계로 보아 청산소득,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이후 분할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음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하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금융부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 상시적 조직재편 지원 세제를 정비하여 조직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과세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전에는 법인이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분할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가치증가분(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분할법인은 청산소득으로 하여 일반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 중 분할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 분할대가 총계(분할교부금 + 분할교부주식 + 포함주식) -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 분할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 포함주식 : 분할일 전 2년내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등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성격상 청산소득에 해당되나 분할법인 자체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분할사업부문의 소득을 청산소득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분할소득 = 분할대가 총계(분할교부금 + 분할교부주식 + 포함주식)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 중 분할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의제배당소득 = 분할대가(분할교부금 + 분할교부주식) - 분할법인 주식(존속분할은 감소된 주식에 한함)의 취득가액

* 분할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압축기장충당금(토지),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하고 자산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분할평가차익 = 자산 승계가액 - 분할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 분할차익 범위 내에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과세체계는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을 청산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7월 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는 분할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전·후 분할시 분할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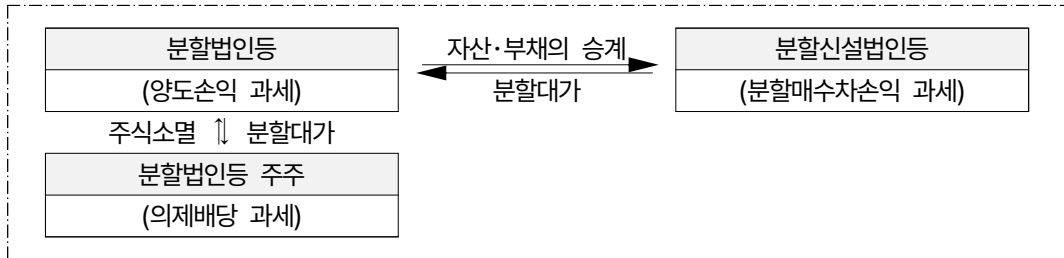
2010.7.1. 전·후 분할당사자별 과세체계

구 분	2010.6.30. 이전 분할	2010.7.1. 이후 분할
분할법인	① 청산소득(또는 일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①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분할법인의 주주	① 분할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과세이연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액면금액 ㉡ 과세이연요건 미충족 시 분할 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분할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적격분할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장부가액(취득가액) ㉡ 적격분할요건 미충족 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분할 신설법인	①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②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① 분할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과세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익금산입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손금산입 ②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적격분할 시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분할신설법 인의 주주	① 분할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분할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2010.7.1. 전·후 분할에 대하여 큰 폭의 과세체계 변경없이 기본적으로 종전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기본 과세체계

가. 인적분할 과세체계



(1) 분할법인등의 양도손익 과세체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은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전시키고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과세한다.

양도손익 =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매수차손익 과세체계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매수차손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매수차손익 =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

(3)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분할법인등의 주주는 분할법인등의 구주식을 반납하고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등의 신주와 교부금 등 분할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와 구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 =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시가) - 분할법인등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구주식의 취득가액)



(4) 적격분할에 따른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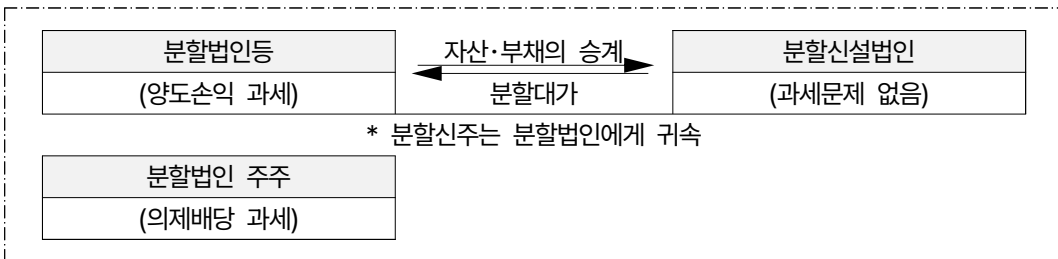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등의 양도손익, 분할법인등 주주의 의제배당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매수차손익을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한다.

따라서 적격분할 시에는 분할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분할시점 이후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인적분할 과세체계 요약

구 분		비적격분할(원칙)	적격분할(특례)
분할법인등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자산-부채) *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분할법인등의 주주		의제배당과세 =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으로 받은 경우 : 시가	주식으로 받은 경우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0
분할신설법인등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 시가와와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후 해당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까지 과세이연
	결손금, 세무조정사항 등	승계 불가(단,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은 승계 가능)	승계 가능(단,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결손금 승계 불가)
	분할매수차 손익	과세(5년간 균등분할 손익 인식)	미발생

나. 물적분할 과세체계



(1)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과세체계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분할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자본감소 없이 자산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점에서 상법상 분할절차를 따르는 것 외에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대가로 지급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으로 과세한다.

$$\text{양도손익} = \text{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분할대가)} - \text{순자산 장부가액}$$

(2)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현물출자를 받고 설립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한다.

한편, 물적분할은 하나의 당사자의 내부거래(조직변경)에 불과하고 분할사업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 보유하므로 양도자산과 양도대가(주식)가 다를 수 없으므로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인적분할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4)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특례

적격물적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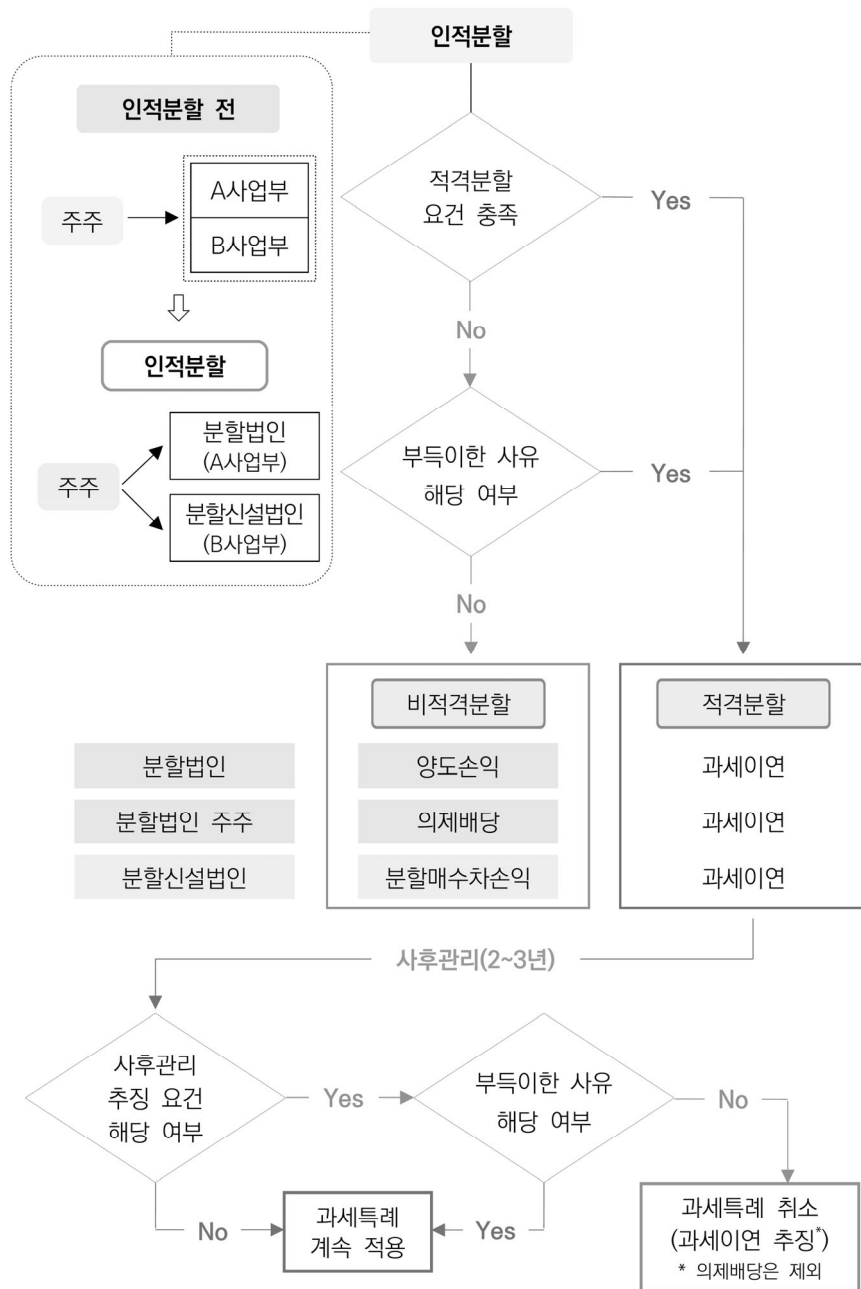
따라서 적격물적분할 시에는 분할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분할시점 이후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물적분할 과세체계 요약

구 분		비적격물적분할(원칙)	적격물적분할(특례)
분할법인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자산-부채) *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 과세이연
분할법인의 주주		미발생	미발생
분할 신설 법인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시가로 승계
	결손금	승계 불가	승계 불가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 가능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 가능
	공제·감면세액	승계 불가	승계 가능
	분할매수차손익	미발생	미발생



〈인적분할 과세체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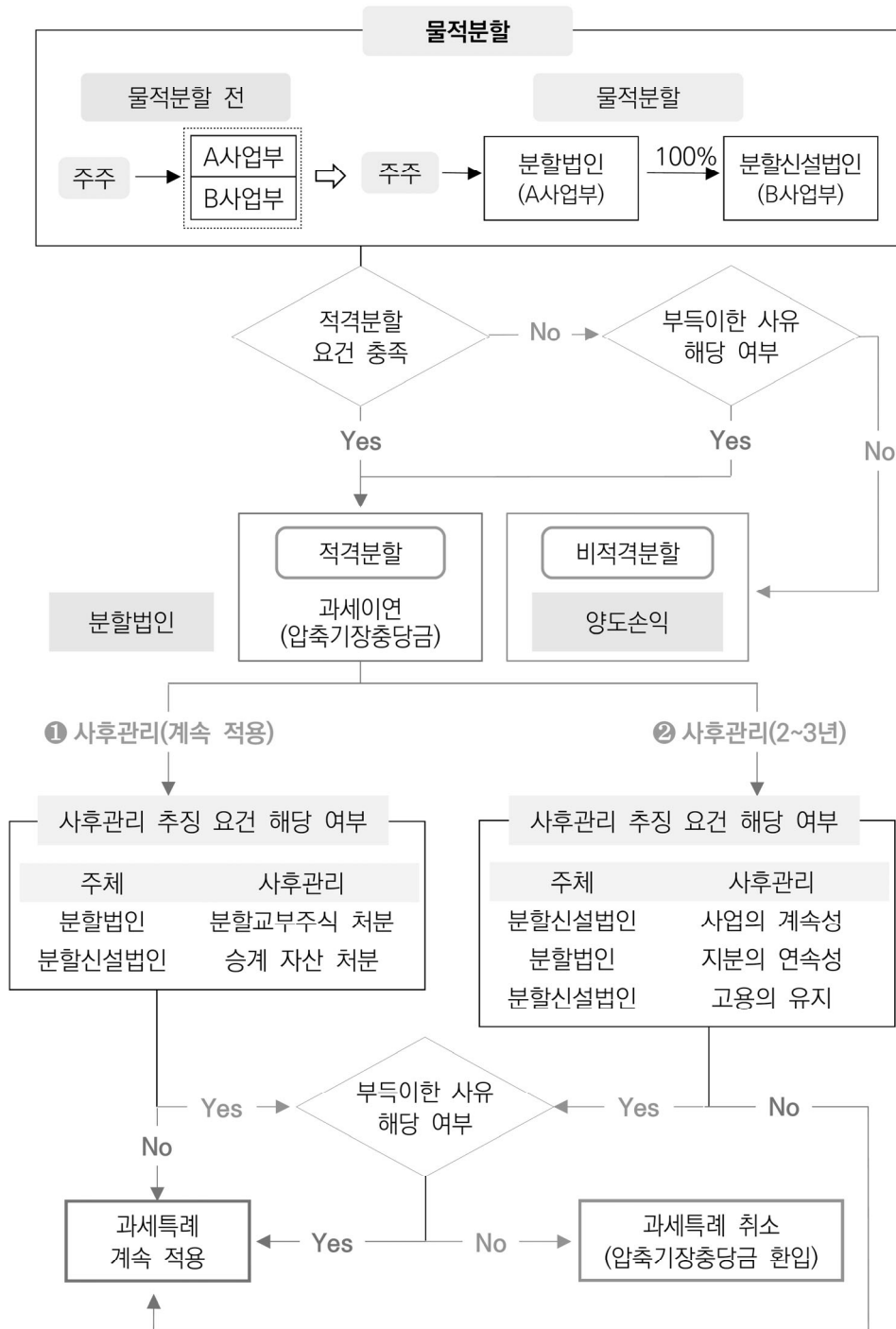


〈비적격인적분할과 적격인적분할 과세 비교〉

구 분		비적격인적분할(원칙)	적격인적분할(특례)
분할법인등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 *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손익 =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분할법인등의 주주		의제배당과세 =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으로 받은 경우 : 시가	주식으로 받은 경우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0
분할 신설 법인 등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가와와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후 해당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 까지 과세이연
	결손금	승계 불가	승계 가능(단,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결손금 승계 불가)
	세무조정 사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 가능	승계 가능
	공제·감면세액	승계 불가	승계 가능
	분할매수차손익	과세(5년간 균등분할 손익 인식)	미발생



〈물적분할 과세체계 요약〉



〈비적격물적분할과 적격물적분할 과세 비교〉

구 분		비적격물적분할(원칙)	적격물적분할(특례)
분할법인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손익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양도손익 전액 과세	과세이연(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Min(①, ②) 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 ②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시가 - 장부가액)
분할법인의 주주		미발생	미발생
분 할 신 설 법 인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시가로 승계
	결손금	승계 불가	승계 불가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 가능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 가능
	공제·감면세액	승계 불가	승계 가능
	분할매수차손익	미발생	미발생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 국세청, 20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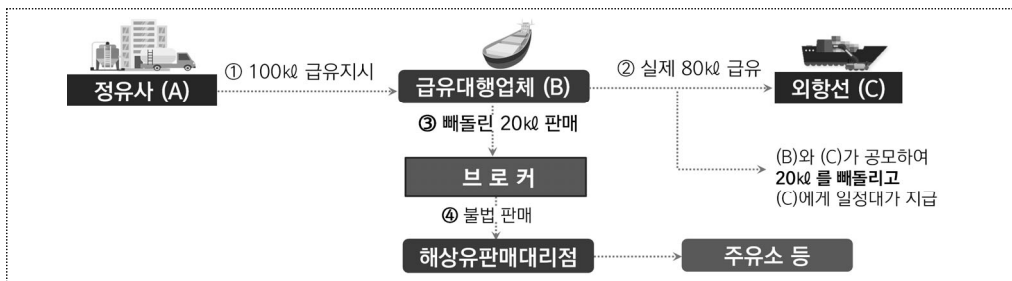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입니다.

| 해상면세유 정상거래 흐름 |



-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



○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지난 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먹튀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일부 업체의 실행위자를 고발하고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적극 차단

①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

□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면서 급유를 지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반입한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절차입니다.

○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유통 됨에 따라,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②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 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 유형별로는 ❶ 급유대행업체 6개, ❷ 해상유평매대리점 3개, ❸ 먹튀주유소 1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상면세유 등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 유형 |

급유대행업체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사로부터 급유 지시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려 불법 매출한 혐의가 있는 업체 ▶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업체
해상유평매대리점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업체 ▶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이 허위인 혐의가 있는 업체
먹튀주유소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높은 업체 ▶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는 업체

- 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였고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조사는 관련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 특히,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사항

□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 정유사 → 급유대행업체 → 브로커 → 해상유평매대리점 → 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